

<세션1 - 현 정부의 ESG New 로드맵>

김도형 | 법무법인(유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수석전문위원)

지난 9월 16일, 정부는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을 이끌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금번 국정과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국정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하여 ESG 핵심 이슈는 △ESG 경영 일반 △기후/에너지 △순환경제/환경규제 △인권/노동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 발표자가 발표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내용을 제외하고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금번 국정과제에서 해외 규제 대응, 공공기관/금융기관에 대한 ESG 경영 요구, 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 마련, 기후기술 투자 확대 및 국민연금 책임 투자 이슈 등 ESG 경영 관련 사항이 중요 과제로 도출되었다. 특히, EU의 탄소/공급망 규제와 ESG 의무 공시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새정부 출범 이후 인권·노동(S) 정책이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 금번 국정과제에서도 인권 보장, 노동자 안전, 노동시간, 비정규직 권리, 성평등 과제가 핵심적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중대재해/안전과 관련하여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적 대비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거버넌스(G)와 관련해서 주주 이익 보호, 개인정보 보호, 중소기업/가맹점주/소비자 관련 공정거래 이슈가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충실 의무 확대, 통신망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맹점과의 불공정거래 이슈 등으로 인해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슈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9월 30일 정부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확정했다. 지역의 성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균형성장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행정·재정 기반 구축이라는 3대 분야와 11개 전략과제 등을 담은 '추진 전략 설계도'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을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5개의 초광역권, '5극'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산업, 교육 등 핵심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남권 등 지역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등 지역 소멸이라는 공통의 현안이자 과제를 안고 있다. '2024년 동남권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동남권에서는 2만 7,580명이 순유출됐다. 이는 2023년(-3만3947명) 대비 6,367명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20대(-2.3%)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지역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서 의미가 있다. 지역의 현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엔진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첨단기술을 접목한 특화된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예컨대, 동남권의 '신성장 산업'으로서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한 선박·항공·자동차 등 미래 친환경 모빌리

티 산업을 육성·강화해야 한다.

모쪼록 금번 ‘2025 동남권 ESG 포럼’의 개최가 지역 기업들의 ESG 경영 강화와 동남권이 ‘친환경 해양수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